

## 월/요/광/장

고영진



며칠 전 서울행정법원은 인천대 조전혁 교수 등이 교육부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 청구소송에서 2002~2005년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원자료를 공개하라고 판결하였다. 그동안 교육인적자원부는 수능성적이 공개될 경우 전국 고교 서열화로 인한 과열 경쟁, 사교육 조장, 교육과정 과정 운영 등 부작용이 발생한다고 정보공개를 거부해왔으나, 재판부는 성적 공개가 수능시험의 공정성을 해치거나 그 평가 업무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다며 공개를 결정하였다.

법원의 이러한 판결에 대해 한편에서는 고교 및 지역간 서열화를 부추기고 학력 신장이라는 명분 아래 입시 위주의 교육이 강화되어 아이들을 더욱 입시지옥으로 몰아갈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반면, 다른 한편에서는 고교 및 지역간 학력 격차가 정확히 밝혀지면 오히려 나눠된 학교와 지역을 과학적으로 파악해 집중 지원하는 정책을 펼 수 있고 교사들도 자극받아 열심히 가르칠 것이라는 찬성의

목소리도 있다.

1974년 시작되어 30년 이상 지속되어온 고교 평준화 제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많은 논의가 있어 왔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논의는 정확한 조사와 객관적인 자

## 대학을 개혁하면 고용문제 풀린다

료에 입각해 이루어지기보다는 페상적·주관적으로 이뤄진 감이 없지 않다. 교육 인적자원부가 관련 정보를 독점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판결로 인해 출신 고교별·지역별 수능성적이 공개된다면 좀 더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논의가 가능하게 될 것이다.

오늘도 공교육의 불평과 사교육비의 증가로 어린 학생들이 끊임없이 목숨을 버리고 젊은이들은 아이를 낳기를 꺼려하며 부모들은 집을 팔아서라도 자식들을 유학 보내려고 한다. 반면 입시학원이 밀집한

지역의 아파트값은 고공비행을 하고 있다. 교육문제가 여러 사회문제를 불러일으키는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가 된 것이다.

따라서 그 의도와 어울린 고교 평준화 제도에 대한 본격적인 분석과 평가는 하루빨리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그러나 필자는 고교평준화가 교육문제 해결의 본질이라고 생각되지 않는다. 잘 알다시피 한 국사회에서 초·중등교육은 모두 대학에 종속되어 있기 때문이다. 한국 교육 문제의 핵심은 대학이다.

다음은 대학에서 학생을 학교생활기록부만 가지고 선발하는 것이다. 학교별 학력차가 심할 때 어떻게 우수한 학생을 뽑을 수 있을 것인가 이의를 제기하자면 서울대 지역균형선발전형의 성공에서 볼 수 있듯이 아무리 학력 차가 커더라도 한 학교에서 1등을 하는 아이라면 그만큼 가능성을 가졌다고 할 수 있다. 그런 학생을 더욱 우수하게 만드는 것이 대학의 할 일이 아닌가. 그러면 특목고 문제도 자연히 해결될 것이다.

듣는 사람에 따라서는 현실성 없는 이야기라고 할지 모르나 노무현정권이 들어서자마자 이런 방향으로 교육개혁을 강하게 추진해 나갔다면 지금쯤 부동산공화국, 도박공화국에 이어 과외공화국이라는 소리는 들지 않았을 것이다.

가장 좋은 방법 중의 하나는 대한민국 학부모들의 교육열을 건설적인 방법으로 유도하면서 교육을 정상화시키는 것일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서울대를 비롯한 국립대를 전면적으로 개혁할 필요가 있

다. 즉 단위로 국립대를 하나로 통합한 뒤 그 국립대 안에 기초학문과 관련된 학과와 사립대가 감당하기 어려운 투자가 필요한 특성화된 공학 분야 한두 개만 남겨두고 응용학문과 관련된 학과는 모두 전문대학원으로 보내거나 통폐합하는 것이다.

다음은 대학에서 학생을 학교생활기록부만 가지고 선발하는 것이다. 학교별 학력차가 심할 때 어떻게 우수한 학생을 뽑을 수 있을 것인가 이의를 제기하자면 서울대 지역균형선발전형의 성공에서 볼 수 있듯이 아무리 학력 차가 커더라도 한 학교에서 1등을 하는 아이라면 그만큼 가능성을 가졌다고 할 수 있다. 그런 학생을 더욱 우수하게 만드는 것이 대학의 할 일이 아닌가. 그러면 특목고 문제도 자연히 해결될 것이다.

듣는 사람에 따라서는 현실성 없는 이야기라고 할지 모르나 노무현정권이 들어서자마자 이런 방향으로 교육개혁을 강하게 추진해 나갔다면 지금쯤 부동산공화국, 도박공화국에 이어 과외공화국이라는 소리는 들지 않았을 것이다.

&lt;광주대 교수&gt;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써주세요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전화 062-2200-634/팩스 062-22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

## 법조 칼럼

오정희



'예향(藝鄉)'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광주와 전남은 '관소리'와 '읍식'으로 유명한 고장이다.

필자도 고향이 전남이긴 하지만, 학업을 위해 상경한 뒤 객지생활을 10년 이상 해온 탓에 광주로 부임한 초기에는 지역 어르신들의 구수하고 겸족한 전라도 사투리에 간혹 웃음을 터져 나오곤 했다. 마치 필자가 서울 출신인 것처럼 말이다.

광주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아 '주거침입 및 폭행' 등의 혐의로 불구속 송치된 사건을 배당받은 적이 있었다.

피해자의 이웃인 60대 아주머니께서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으러 왔다. 그 아주머니는 검사의 질문에 끌려가 무섭게

하지만, 일정한 경우 피해자의 의사가 형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기해자에 대한 처벌의사를 문의하는 경우가 많다.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기소권이 좌우되는 범죄나 그다지 크지 않은 재산분쟁에서 비롯된 사건인 경우가 그렇다.

최근에는 민사소송에서도 승자와 패자를 가르는 일도 양단(一刀兩斷)식의 판결을 지향하고, 양(兩) 당사자의 화해를 유도하는 조정제도를 많이 활용하고 있다.

검찰도 민사소송 기관은 아니지만, 기소 전 단계에서 화해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맡기도 한다.

광주지검에서 근무하는 동안 가해자

## 운주사 와불(臥佛)을 생각하며

가해자를 지칭하며 "그 사람 성격 참 거시기 험다"로 시작해 당시 상황을 막 힘없이 너무도 구체적으로 진술을 하기 시작했다.

진술 중간, 마치 추임새처럼 "오메!", "궁께!"라는 등의 전라도 사투리가 걸쭉하게 쏟아져 나왔다. 목격한 상황을 가감 없이 진술하기 위해 노력하는 진지함에 감사했고, 오랜만에 듣는 '진한 고향 사투리'에 마치 필자는 낙낙한 고향에 돌아온 느낌을 받았다. '예향' 광주인 고향으로 부임했지만, 근무하는 곳이 겸찰청인자라 가해자와 피해자로 얹혀있는 사건 관련인들로 만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가끔 '멋스럽고 낙낙한 분들이 이는 곳이 맞기는 맞구나!' 하는 것을 실감할 때가 있다. 겸찰청은 유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들을 기소하는 기관이다.

&lt;광주지검 검사&gt;

에 대한 처벌의사가 완강할 것이라고 예상했던 피해자가 가해자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고려하거나 젊은 사람으로서 발전기능성 같은 점들을 고려, 용서하는 모습을 유난히 많이 보아왔다. 피해자가 오히려 가해자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용기를 북돋우는 모습을 볼 때면 일에 대한 보람과 함께 지역민의 낙락한 마음에 경의를 표하게 된다. 전불전탑(千佛千塔)의 화순 운주사에는 한 쌍의 와불(臥佛)이 있다.

그 질박한 외양에 걸맞지 않게 '이 와불이 일어나는 날 새 세상이 열린다'는 전설이 있다.

이 와불과 같이 소박하고 낙락한 '예향인'의 마음이 통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이 '법 없이도 살 사람아, 편하게 사는 사회', '정의로운 사회'로 가는 것이라고 마음속에 새겨본다.

&lt;광주지검 검사&gt;

## 초·중·고 눈병확산 확실한 대책 마련해야

## 기고

## 박철홍



지난 7월 한달간 하늘이 끓인 듯 전국적으로 많은 비가 쏟아져 내렸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공식집계에 따르면 7월 10일 날씨 진도에 상륙한 태풍 애비니오는 남부지방(전남, 경남, 경북) 중심으로 많은 비를 내리며 11명의 인명피해와 1,899세대 4,710명의 이재민을 발생시켰고, 태풍에서 벗어난 바로 다음날인 11일부터는 남부지방과 제주도 사이에 정체되어 있던 장마전선이 북상하면서 전국적으로 48명의 인명피해와 2,637세대 6,012명의 이재민이 추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전국 평균 강우량 423mm라는 엄청난 집중호우에도 불구하고 수해의 규모가 이 정도로 그칠 수 있었던 것은 바

철저히 분석·예측하여 댐하류지역의 하천이 범람하지 않도록 댐운영에 만전을 기하였다. 그 결과 이번 호우때 강우가 집중되었던 남부지방에서는 소양강댐, 충주댐, 흥성댐을 운영하여 한강의 인도교를 기준으로 흥수량 17,040m<sup>3</sup>/s, 하천수위 3,744m(댐없을 시 13,96m), 실제 하천수위 10,220m(댐없을 시 낮출 수 있었으며, 또 우리 전남지역의 경우에는 섬진강댐, 주암댐을 운영하여 송정지점을 기준으로 흥수량 2,210m<sup>3</sup>/s, 하천수위 2,81m(댐없을 시 13,20m, 실제 하천수위 10,39m)를 낮출 수 있었다.

다목적댐의 흥수조절 효과는 비단 물에만 국한된 일은 아니다. 2003년 대풍 때 폐미가 우리나라를 강타하여 4조 2,

## 수해방지 최고의 선택은 다목적댐

로 다목적댐이 있었기 때문이다.

다목적(多目的)댐은 흥수조절, 수력발전, 용수공급 등 여려가지 목적을 수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댐을 말한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소양강댐, 충주댐을 비롯하여 총 15개의 다목적댐이 건설·운영 중에 있는데, 이 다목적댐의 주된 목적 중 하나가 바로 흥수조절이다. 특별히 여름에 집중되는 강우를 맴지수지에 담아 두게 되면 격차하게 불어나는 하천수의 범람을 막을 수 있다.

이번 집중호우에도 효과적인 치수를 위해 다목적댐을 관리하는 한국수자원공사(K-water)에서는 호우기간 동안 댐운영에 총력을 기울였다. 먼저 흥수에 대비하기 위해, 예년도 강우량을 고려하여 사전에 댐지수지 물을 방류함으로써 저수지의 수위를 낮춰 두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강우가 내리는 기간에는 댐유역 내 강우유입량과 방류량을

225억원이라는 엄청난 피해를 냈을 때에도, 2002년 태풍 루사, 2000년 태풍 벌리스 등 매년 커다란 집중호우와 태풍이 발생할 때마다 다목적댐은 수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하여 뚝뚝히 자리를 지켜왔다.

매년 발생하는 수해를 원천적으로 막아내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사전에 재해에 대비함으로써 그 피해를 최소화하고, 이미 발생한 수해에 대해서는 빠르게 복구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그러나 막상 수해가 발생하면 우리의 관심은 피해규모와 피해복구에만 집중된다.

물론 빠른 피해복구가 우선이겠지만, 동시에 사전대비로 흥수조례를 최소화시키기 위해 묵묵히 일해 온 다목적댐의 고마움에 대해서도 한번쯤 생각해 보면 어떨까 한다.

&lt;K-water 전남지역본부장&gt;

## 공공장소에 모유 수유 할 곳 있었으면

모유 수유를 하는 주부다. 정부에서도 모유 수유를 권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번씩 외출을 할 때면 여간 걱정이 아니다.

2~3시간마다 한번씩 수유를 해야 하는데 편안히 수유를 할 곳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모유 수유를 원장하면서도 광주시내 어디를 가도 마음 놓고 모유 수유를 할 수 없게 만드는 현실이 참 유감이다.

지금 수유 몇 일 더하고 고집피우다가 눈병이 전남 광주와 완전히 펴져버리기 전에 확실한 휴교대책이 나오기를 바란다.

&lt;신영하·여수시 봉강동

외출에서도 엄마들이 마음 놓고 모유를 먹일 수 있도록 사람들의 출입이 빈번한 관공서와 기자회견 그리고 시외버스터미널 등에 모유 수유실을 만들어 주었으면 한다.

세계 최고수준의 저출산 상황에 직면해 자칫하면 국가적 재앙이 될 수도 있을 거라는 우려가 있지 않은가.

국가나 자치단체가 나서서 해결해주면 좋겠다.

&lt;황인희·광주시 동구 대인동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만화, 만평도 환영합니다. 채택된 원고는 고로 지급합니다.

## 시설

## 인건비도 못되는 지방 재정 이대로 둘 건가

지방재정의 규모는 점차 커지고 있지만 자립도는 오히려 낮아졌다. 10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올해 지방재정 규모는 청상을 100조원을 넘어섰으나 재정자립도는 54.4%로 지난해에 비해 오히려 1.8%포인트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50개 자치체 가운데 60%에 해당하는 151개 자치체는 지방 세민으로는 인건비조차 충당하지 못했다.

따라서 일부 국세의 지방세 전환 등 지방 재정확충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시급하다. 참여 정부도 출범 초기에 지방분권 촉진과 자치체 재정 확충을 위해 지방 소비세와 지방 소득세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지 않는가.

이처럼 지방 재정자립도가 낮은 것은 불합리한 조세 체계 탓이 크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은 약 8 대 2다.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이 5 대 5 또는 6 대 4인 선진국과 비교하면 조세

## 10년 끈 노사 선진화안 더 미뤄선 안된다

노사관계 선진화 방안(로드맵)의 입법에 고개를 앞두고 이해 당사자 간의 대립이 침체화하면서 좀처럼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노동계는 정부가 로드맵 입법에 고개를 기울여 한강의 입법에 따른 협의를 강행하면 전면 투쟁에 나서겠다는 경고 입장에서 자칫 파국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부터 복수노조는 협약되고 노조전임자의 임금 지급은 금지된다. 그러나 이를 둘러싼 노사 간이나 노노 간, 또는 기업들 간의 엇갈리는 이해관계로 지금까지 세부 정책조차 정하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는 것이다.

당초 한국 노총과 경영계가 합의한 '5년 유예안'은 민노총이 반대하고 개혁 취지가 훼손된다는 여론에 따라 무산됐다. 그러나 이상수 노동부 장관은 10일 "합의가 되면 '3년 유예안'으로 갈 수도 있고 합의가 안 되면 '1년 유예안'으로 입법에 고개를 끊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는 10년을 시행 연기한 법안을 또다시 연기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설령 이 장관의 말대로 1년 유예안으로 갈 경우도 내년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또 얼마나 많은 소모전과 정치권의 개입이 이뤄지겠는가.

따라서 정부는 더 이상 노사에 끌려가지 말고 빠른 시일 내에 국제적 기준을 바탕으로 합의점을 모색한 후 과감하게 결단을 내려야 한다. 노사 역시 대국적 차원에서 노사 로드맵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할 것이다.

## 無等鼓

미국 최초의 1억달러 부자인 코넬리어스 밴더빌트. 염치없는 협잡과 매수, 잔혹한 공갈과 합병으로 엄청난 부를 이룬 사나이다. 돈을 위해서라면 수단을 가리지 않았다. 이를 조차 제대로 못했던 문맹 수준의 밴더빌트는 선박 운송업으로 사업을 시작한 뒤 미국 서부개척시대 철도 사업으로 평탄을 벌었다.

그가 1877년 죽어 재산을 둘러싼 싸움이 벌어졌다. 결국 밴더빌트의 재산은 32명의 자손들에게 분할됐다. 그로부터 100년이 조금 못지나 1973년 후손 120여명이 조상이 세운 밴더빌트 대학에 모